

화순천 4개마을 “돼지분뇨 유출 축사 폐쇄 촉구 공동대응”

가칭 ‘분뇨무단방류축사폐쇄대책위’ 구성

추석 전까지 관계법령 등 검토 공동행동

“피해 발생한 만큼 화순군 명확 조사해야”

화순천 돼지분뇨 유출 사고와 관련 인근 주민들이 축사 폐쇄를 요구하기 위해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화순군 동면 돼지축사 인근 4개마을은 23일 가칭 ‘분뇨무단방류축사폐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추석 전까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뒤 축사 폐쇄 등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또 돼지분뇨 화순천 유출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주민 증언 등을 토대로 사진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물고기 폐사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대책위는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이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야산 중턱에 설치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주변 환경오염 상태 등을 조사해 관계기관 등에 고발 등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서명운동 등을 통해 축사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리고 화순군에 폐쇄 의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돼지분뇨 유출 4일째이지만 하천 곳곳에서 죽은 물고기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사 축은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수해 때문에 비슷한 일이 발생해 화순군에 대책을 요구했

었다”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화순군은 명확하게 조사한 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일 오전 화순군 동면 천덕마을에서 1km 정도 떨어진 축사에서 돼지분뇨로 만들어진 액상비료가 화순천으로 유출돼 악취와 함께 물고기가 폐사했다.

수질은 정화되고 있지만 돼지분뇨 알갱이가 하천 바닥을 덮고 있어 물고기 폐사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화순군은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가축분뇨공공수역유출 혐의로 검찰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20일 오전 전남 화순군 동면 한 하천이 오염된 가운데 관계당국이 축사에서 오염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켓 든 참석자들 택배노동자들과로사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서울 민노총에서 ‘정부와 택배사 분류작업 인력투입 중간실태 발표’ 및 ‘분류작업 인력투입 약속지키지 않고 일요일까지 근무 강요하는 재벌택배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잡았다... “베트남 은신, 30대 남성”

인터폴 공조수사 통해 호찌민서 검거...추적 20여일 만

성범죄자 등 흉악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익명으로 활동해 왔던 이 운영자는 30대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전날 오후 8시(현지시간 오후 6시)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가 해외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

한 수사관서가 지난달 31일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지 약 20일 만이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및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캄보디아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개시

했다.

이후 A씨가 지난해 5월 다시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받아 베트남 공안부 코리안데스크에 A씨 검거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경찰청에서 국내 수사팀의 자료와 비교해 최종적으로 A씨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고, 전날 베트남 공안이 현지에서 귀가하던 A씨를 검거했다”며 “베트남 공안부에서도 디지털교도소 관련 사망자가 나오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적극 조치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구급차 막은 택시, ‘살인죄’ 될까... “판단 6개월 걸려”

사망과 이송 지연 사이 연관성 보려는 듯

택시기사가 사실 구급차와 고의 사고를 내고, 이후 병원 이송이 지연된 환자가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 기사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망경위 파악 등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고, 의협 측은 감정 기간을 약 6개월로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 택시기사 최모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7월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의협에 사망한 A씨의 의무기록 사본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망경위를 파악하는 동시에 최씨가 낸 사고와 A씨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의협 측은 경찰에 ‘이날 1일을 기

준으로 약 6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감정물 회신 결과 등을 토대로 사망경위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도 출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씨 측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폭행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서 별도로 고소돼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됐고 경찰에서 불기소의견 송치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불기소의견 송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씨 측은 “6월8일 사고는 국민청원과 언론보도에 의해 이슈화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 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환자가 중하다는 사실,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 와서 일부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다”며 “폭력 전력이 11회 있고, 수년간 보협사기 등 동종 수범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 도로로 끼어드는 사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게시물에 대한 청원 동의자 수가 70만명을 넘을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0월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봉우기자

법원 “허재호 형사재판 안 나오면 구속영장 발부하겠다”

“반드시 다음 기일 출석해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허재호(77) 전 대우그룹 회장의 형사재판이 허씨의 불출석으로 또다시 공전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허씨의 변호인은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씨가 지병 악화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한국에 늦게 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위가 어찌됐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허씨가 출석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 반드시 다음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입국 거부는 구속 사유”라고 강조했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